발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광장

www.council.jeju.kr

2023 제97호 05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 전화 064-741-2285 팩스 064-741-2329 ISSN 2671-9754

마늘 수확 일손 돕기 '구슬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3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마늘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에 나섰다. 마늘 수확시기에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힘을 보태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날 의원 및 사무처 직원 20여명은 마늘 수확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 모아 나가겠다"

제416회 임시회 11일 회기 종료
19일 제주도 추경안 심사보류
도교육청 제1회 추경은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류했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됐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개회한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데 대해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보류된데 대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는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양경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40분 추경안 심사 회의를 속개해 "금번 추경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다. 그러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민생경제와 밀접한 읍면동 예산과 주민편의 예산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의 소통부족으로 예산안에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여 이에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예결위원들이 찬성함으로써 2건의 안건 모두 심사보류됐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당초 오후 2시 개회할 예정이었으나 집행부와의 원만한 협의를 위해 오후 4시, 오후 6시, 오후 10시 등 3차례나 연기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막판까지 도와 예산안 협의를 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부득이 심사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심사보류된 제주도 제1회 추경과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외한 조례안 24건과 동의안 38건(공유재산 5건, 명예도민 27건 등), 예산(기금)안 1건 등 63건의 안건이 심의안건이 올라와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안건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지면 안내

종 합 ▸1
제416회 임시회 ▸2
의회 주요 이슈 ▸3~4

상임위 쟁점 ▸5~7
생생 의정활동 ▸8~9
함께합시다 ▸10~11
사무처소식 ▸12

“도민을 위한 도민의 예산될 수 있도록 최선”

김경학 의장 개회사서 밝혀
편성 취지 충분한 설명 필요
행정동 조정…역량 시험대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지난 9일 제41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매우 엄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도민을 위한 도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와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정에서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5.84%인 4128억 원 증가한 7조4767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했다”며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회 일정을 앞당기는 데에 동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다”며 “이번 추경 예산의 4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얼마나 시급하며, 예산 편성의 취지와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한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을 80억 원이 늘어난 1조6015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다”며 “세출예산 절감을 통한 재정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잦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과도한 예산 증액, 공약사항 이행을 이유로 대폭 늘고 있는 용역 예산 등에 대한 엄정한 심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도가 제주지역 행정동 조정 논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도민 의견수렴과 주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1985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되어 온 제주의 행정동은 택지개발 지구 증가와 구도심 인구 감소 등으로 동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행정동 조정에 대한 논의를 2008년에 추진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 조정 논의는 제주도의 자치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학 의장은 이어“행정동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에 매몰되지 않고 주민 생활 편의에 입각하여 구역 조정까지 포함한 최적의 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 어느 때 보다 의회와의 소통 부재” 질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내내 ‘불통’ 지적
민생 사업 중점 편성 의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심사과정 내내 집행부의 소통 부재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양경호 위원장은 지난 16일 진행된 제416회 임시회 예결위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소통이 부재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양경호 위원장은 “제주도정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이라고 밝혔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88억원까지 사용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도민들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에 희망을 주는 민생 안정사업에 중점을 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특히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보류 결정에 대해 이례적인 언론 브리핑까지 하며 향후 도의회 심의·의결과정을 압박해 의회 고유 권한마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회의 기능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가칭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혁신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언급하며 “추경안에 해당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미 4월 해당 용역이 체결됐다. 예산 심사과정이어서 확정된 게 아닌데도 계약이 됐다. 명백히 절차를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관할 부서의 추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정무부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회와 도정이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경호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 추경안’에도 불구,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하고자 한다”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소통 부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종합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다른 사업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과 관련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현지홍 부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의회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 예산을 다른 사업에 편성했다. 의회와 소통이 부족한 점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역시 “최근 예산 심사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는데 교육청도 동일하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의회-중국 산시성, 다분야 교류 모색

4월 25~29일 중국 방문
코트라 시안무역관 등 찾아
제주 교류 확대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중국 산시성 인문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다분야에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산시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완화와 중국 정부의 하늘길 개방에 따른 관광 재개 등으로 그간 일시 중단됐던 국제교류 활성화와 새로운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의회 방문단은 4월 25일 중국 산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해 양광팅 부주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산시성 간 우호 교류 협약체결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문화·관광·농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산시성간 새로운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환경·교육 등 다방면에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27일에는 제주도의회 방문단의 중국 코트라 시안무역관 방문도 이어졌다.

김남욱 코트라 시안무역관장을 비롯해 차혁진 한국관광공사 시안지사장, 공진식 서북3성 한중기업협회장과의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관광패턴에 대해 청취하는 한편 중국 관광객의 제주 방문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가 이어졌다. 이외에도 제주상품의 중국 수출 확대와 제주지역 기업들의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나눴다.

제주도의회 방문단은 4월 28일 마지막 일정으로 김한규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 문미경 시안한국인상회 회장과 잇따라 면담을 진행했다.

김경학 의장은 "재중제주인의 고충을 이해하고 교류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제주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제주를 홍보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중제주인에 대한 지원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공 기관에 대한 참여 유인책 마련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또 "지난해 9월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지 7개월이 흘렀다"며 "장애인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사회서비스 필수인력 양성은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움직여주실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몽골 셀렝게아이막, 경제분야 협력 논의

4월 24일 도의회서 면담
몽골 계절근로자 초청
감귤농축액 수출 등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몽골 계절근로자 초청에 대한 의견 교환과 제주감귤농축액 몽골 수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주도의회에서는 김경학 의장(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과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 송영훈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원읍), 강봉직(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강성의(더불어민주당, 화북동)·박호형(더불어민주당,일도2동)·정민구(더불어민주당, 삼도1·삼도2동)·현길호(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의원, 김애숙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으며, 몽골 셀렝게아이막 방문단에서는 사옥더르츠 도지사와 어용벌트 의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몽골은 최근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제주의 다양한 1차 산업 생산품을 직접 보고, 제주의 1차 생산품이 몽골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방문에서 의회와 도, 개발공사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데 몽골과 제주간 교류가 늘어나고 양 지역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양 지역이 자주 왕래를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이자"고 말했다.

사옥더르츠 도지사는 "셀렝게 지역은 농업과 축산이 발전하고 있으나 기술이 부족해 제주에서 배웠으면 한다"며 "제주 방문을 통해 제주와 몽골이 협력 가능한 것을 찾고 제주와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몽골 셀렝게아이막 도지사와 의장, 도교육청 대표와 기업체 대표로 구성된 몽골 방문단 은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일정으로 도의회와 제주도, 도교육청, 제주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등을 방문했다.

마을을 위한 예술의 역할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8일
문화관광정책포럼 펼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2차 제주문화관광정책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신겸 전남대학교 문화관광전문대학원장이 '지역여행을 바꾸는 힘, 예술관광이다' 주제 발표에 나섰다. 문화도시 관광전략과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문화경제를 통해 예술로 열어가는 관광활성화 예술 여행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며 예술이 마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승아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예술관광의 유형 및 주요 사례를 접하게 된 계기"라며 "제주에서 예술과 관광의 융합은 제주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성명
정부의 대책 마련 등 촉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는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안재권)와 지난 10일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관광도시 제주도와 해양수도 부산시는 해양자원을 활용한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 없이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제주도와 부산시의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위기의식을 고려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절차에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이 밖에도 △해양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강화 및 실시간 공유 시스템 마련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및 방사능 검출 시 대응 매뉴얼 마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가짜 뉴스’ 확산 지양 △어업인 피해지원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연호 위원장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를 위한 시·도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향후 전국 17개 시·도와 서로 협력해 어업을 위한 수산분야 피해대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지킴이 활동 운영 점검 필요해”

보건복지안전위 2일
장애인복지토론회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는 지난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효적 인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 시설 내 인권상황의 현황과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적 제도 마련과 정책적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병준 한국입법연구원 이사는 토론회를 통해 “시설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용인의 자기 역량 강화 방안 마련과 장애인 인권보호관 제도 운영 등이 필요하다. 인권 지킴이 활동도 실제적인 성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미 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 증진에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이 나오고 있다. 안전지킴이단의 실효적인 운영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토론회가 이벤트성에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인권 증진의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 제언과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4·3 국제적 해결 촉구’ 국회 결의안 환영”

4·3특별위 10일 환영 논평
필요한 역량 집중해 나갈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 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는 지난 10일 논평을 내고 “국회의 ‘제주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동참 결의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6일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의·의결했으며, 이후 4월 10일 본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을 주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의회의 결의안은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뿐만 아니라 4·3발발 당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국이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구성 및 운영, 그에 따른 사과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미합중국 의회 등에 전달됐다”고 덧붙였다.

4·3특별위원회는 특히 “국회 또한 ‘제주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4·3특별위원회와 뜻을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서는 발발과 진압과정 등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4·3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하며, 4·3특별위원회 또한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5일 ‘NO EXIT’ 릴레이 동참
다음 주자 제주대 총학회장 지목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지난 15일 제주도내 마약범죄 중독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지목을 받은 김경학 의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박주영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목했다.

김경학 의장은 “마약은 우리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지난해 적발된 제주지역 마약사범은 124명으로 지난 2021년 대비 63.6% 증가했고, 올해도 3개월 간 34명이 검거돼 작년 동기대비 41.7%나 증가하는 등 도내 마약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젊은 지성을 주도하는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마약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활력’어디에…추경안 도마 위

행정자치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어려운 곳에 직접 투입해야”
송악산 사유지 매입 심의 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연동을)는 지난 12일 제416회 임시회 중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제주도가 제시한 ‘민생 경제 활력 추경안’이 정작 민생 경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민생경제와 무관한 사업이 예산안에 많이 올라와 있다”며 “서귀포 케이팝 문화콘서트 개최 사업은 당초 보다 2억원이 증액 되는 반면 둘째 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사업과 노후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감액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도 “추경 예산안 심사가 1주일 앞당겨진 취지는 내수 진작의 방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계층에 가장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역시 “어려운 시기에 꼭 투입할 때가 어디인지를 선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한편 강철남 위원장은“예산이 어려워서 추경을 했는데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이번 추경에서 실제 재원이 2700억원 정도인데 1300억원이 시설비, 800억원이 지사 공약 사업에 사용된다. 복지쪽도 알고보면 다 시설사업으로, 취약계층 안정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도 “지사의 공약 추경예산의 20%가 넘는다.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추경예산 절반 이상이 시설비와 지사 공약사업 등이다. 1차 산업은 홀대받고 있고 양 행정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1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도로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 용역 추진’에 따른 긴급 현안업무를 보고 받은 가운데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권 의원은 “연구 용역 중 성과평가에 도민·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만 나왔다”라며 “정작 도민이 느끼는 주민 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문제점이 실제 자치권이 없는 현재 행정시 체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 관계’ 분석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제주도가 제출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사업과 관련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 이유를 밝혔다.

“재정 어려워지는데 고정비용 지속 증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시 지방하천 안전점검 용역
추경 심사 전 입찰 발주 논란
노키즈존 금지 조례 ‘심사보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가운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에서는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2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시의 ‘지방하천 복개구조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추경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제주시가 임의로 풀예산을 가져다 쓰며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이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기존 예산 반영액이 3억원인 용역이 추경 심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라장터에 입찰 발주됐다”며 “추경을 통과시키면 예산을 다시 메우겠다는 건가. 대체 의회의 심사 권한을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경미 위원장도 “풀예산을 미리 썼다는 발언은 위험하다”며 “미리 쓴 돈을 메우기 위해 1차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마약 관련 예방 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원화자 의원은 “마약 관련 언론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고, 제주에서도 심각하다. 마약 중독이 있기 전 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이 없다”며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이 제동을 걸었다.

이상봉 의원은 “활동비 지급 이전에 도내 아동·청소년 시설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며 “지방 재정 부분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고정 비용들이 지속 나가는 건 아닌 것 같다. 관련 예산은 이번 추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도 “도지사 공약 사항은 추경안에도 많이 포함됐다. 의원이 지역을 대표하여 필요하다고 제안한 건 유보에 삭감까지 됐다. 예산 편성이 거꾸로 가는 실정”이라고 이번 추경안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한편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노키즈존 금지 조례’는 심사 보류됐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은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방임하는 부모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며 “노키즈존은 아이의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영업 권한 문제로, 이를 조례로 막을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어떤 사안이든지 도민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함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위법이 없는 상황이기에 행정에서도 깊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공주택 부지 매입비 추경 기조 안맞아"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대 버스회차지 매입 등 추가경정예산 비판 제기 현안 적극 관심 주문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가 지난 15일 제416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정면 비판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대 버스회차지 매입과 관련해 "관련 조례를 살펴보니 연도 중 공유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며 "최소한 지난 회기 때는 심사를 받았어야 했던 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새로 매입하는 제주대 버스 회차지 부지는 매입 예산만 88억7000만원 규모"라며 "토지주가 평당 280만원이면 제주도에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추경이 통과되더라도 토지주가 매각하지 않으면 88억원은 불용처리 될 수 있다"고 토지주와 매매 체결을 위한 협약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공공주택 토지 매입비 지적에 나섰다. 임정은 의원은 "추경 규모가 4128억원인데 공공주택 매입비만 150억원으로 전체 추경 예산의 3.6%를 차지한다"며 "공공주택 부지 매입비는 도지사 공약인데 이번 추경예산 편성 기조인 민생경제 활력, 서민경제 안정, 내수진작에 해당되느냐"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기종 의원 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특정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의 증감 사유를 보니 운송 비용증가와 교통복지 확대 재정 지원 증액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서 확보가 부족했던 것인가"라며 "경영안정화와 재정지원을 이유로 버스업체에 인센티브만 지속해서 주고 있다. 보조금 감액 같은 패널티가 필요치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이번 추경안에 감액 금액이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심도 주문됐다.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삼화부영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3차, 5·6차 거주인들이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여건이 좋지 못해 분양을 못받으면 행정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 누구도 피해 입지 않을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송창권 위원장은 "인도 블록에 설치된 가로등 설치 때문에 다닐 수 없는 경우들을 많이 봤다"며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일 것을 주문했다.

"준비 부족한 사업 예산편성만 수억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민생 경제 활력 기조 불구 대부분 지사 공약 사업 지적 보조금심의위 향한 질타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오라동)는 지난 10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날선 지적들이 나왔다. 제주도의 '민생경제 활력 예산' 기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공약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중론이다.

이승아 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민생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도 문화예술인들의 소규모 예산 다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면 도지사 공약 관련 수억원 규모의 예산은 포함시키는 등 형평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이번 추경에 문화예술인의 활력과 상관없는 공약 사업 예산이 너무 쉽게 책정됐다"라며 "그런 공약 사업 예산으로 문화예술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사업 10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무오법정사 다큐 사업을 보면 영상촬영 2억, 영상편집 8000만원 등이 적혀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준비가 부족한 사업에 편성된 수억원이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작은 예산들을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역시 "재정안정화기금까지 활용해 민생경제에 주력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교육·관광 등에 대한 형평성이 의심스럽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공약사업이 우선인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우선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사에서는 제주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지난해 본예산에서 의결된 예산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이번에 추경안에 올라왔다"며 "의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 역시 "문화관광 분야 보조사업 중 50%이상이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지난 3년간 초토화됐던 문화·관광이 이번 추경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꿈이 산산조각났다. 이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횡포이고 문화관광에 대한 홀대"라고 비판했다.

제주4·3관련 예술 공연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도 주문됐다.

강상수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4·3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전국적으로 관련 공연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양 행정시 문화예술부서 국장님들은 신경 써서 공연을 계속 지속해주길 바란다. 행정이 의지를 보여준다면 도의원들도 예산 문제를 반영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이전 안전성 담보해야"

농수축경제위원회

원천수 방류 대응 예산 뭇매 "위기 의식 부족해 보인다" 행원 그린수소 현장 방문도

지난 1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 국민의힘, 표선면)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제주도정의 대응 예산이 수산물 소비 촉진에 치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따른 대응 방안 강구를 위해 이번 추경에 24억원이 증액돼 총 142억원이 반영됐는데 사업 대부분이 수산물 소비 촉진 방향으로 편성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성을 담보하며 이후에 소비 촉진 등 판촉 행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어업인들과 도민들은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는데 제주도는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국제원자력기구가 11개 국가에서 모니터링단을 만들어 방사능 안전성을 검증하는데 관련 자료와 운영비를 일본에서 지원받아 공신력에 의문이 든다"며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데 원산지 표기 등을 명확히 해서 수산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제주도가 피해 유무와 수산물 안전성 확보의 유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과 연대해 반대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미국과의 연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밖에도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행정 서비스에 '메타버스'를 활용하려는 제주도정의 계획과 관련해 "메타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대는 젊은 층"이라면서 "아동이나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포용서비스로서 메타버스 제주를 구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행원 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3MW 그린수소 생산기지와 그린수소 충전소에 대한 사업개요, 시설 구축 등 추진현황에 대한 내용을 김창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강연호 위원장은 "제주도정이 당초 계획한 그린수소의 생산설비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 공급과 유통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빠른 시일 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완료해 수소 차량이 제주를 누빌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171억 내부유보금 다른 사업 편성 '질책'

교육위원회

교육지원센터 내부 유보금 협의 없이 추경 사용 비판 "긴축 편성 예산안도 아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는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지난해 말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건물·부지 취득이 무산됨에 따라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던 예산 171억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원들이 숙고해서 171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뒀는데 추경안을 보니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김대진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더 좋은 장소를 찾아달라고 내부 유보금으로 뒀는데 다른 예산으로 써버린 것"이라며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황국 부의장(국민의힘, 용담1·2동) 역시 "막대한 예산을 추경으로 쓰려고 하면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했다"며 "내부유보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을 찾아서 다시 심의를 올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예산 편성과 현안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들이 나왔다.

오승식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은 "추경을 살펴보면 미래 제주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며 "긴축예산이라고 했지만 역시 그 부분은 살펴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이운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예산에 대해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강동우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동부)은 "제주의 특색을 살리는 교육이 교육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긴축 예산이라고 하지만 해외연수 7건이 올라왔다. 지난 본예산 때 해외 연수관련 많은 의원들의 질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예산이 맞냐"라고 꼬집었다.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은 교육청 발송 공문과 관련해 "최근 공문 발송 자료를 받아보니 전년대비 3배가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의숙 의원은 "실제적인 학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인가 의문"이라며 "행정 업무 편의를 위한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및 급식실 증축 현장을 방문, 향후 사업추진 일정을 청취하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급식실이 지하에 있어 학생 및 급식종사자들의 건강악화가 우려돼 지상으로 이전하는 대책 마련을 해 왔다"며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간병서비스, 제도화 접근 필요"

사회보장특별위원회 특강
제주형 서비스 마련 취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지난 4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간병 서비스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고령화 사회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 실정에 맞는 간병서비스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최령 동신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간병서비스 현황과 법제화 인식'발제를 통해 간병서비스 급여화(법제화) 입법시 고려사항으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기관 역할 재정립 △간병 인력 전문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강조했다. 또한 사적 고용 형태의 간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우려하며 공적인 간병 서비스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민철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정책연구팀장은 "간병노동자가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과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간병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나 근거가 있지 않다"며 "제주지역의 간병노동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간병서비스는 환자 당사자와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나 간병 파산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간병에 대한 부담과 어려움이 크다"며 "간병 서비스를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의료 및 돌봄의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사회적기업 연계 모색

제주사회적경제포럼 4일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사회적경제포럼(대표의원 강경흠, 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지난 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제주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승근 한국공학대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 나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대한 응원의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호 사회적기업㈜공감만세 연구소장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에 고향세 기금을 활용하고, 사회적 일자리와 연결 및 연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민간플랫폼 활용과 홍보 및 기부자·답례품 관리의 위탁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경흠 대표의원은 "기부금 모금 및 홍보, 기부금 활용처 발굴 등은 행정에서 전담하기 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간주체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제주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대가 강하게 구축되어 있어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와 마케팅, 기부처 발굴 등에 있어 우수사례로 발굴될 수 있도록 '도의회-제주도정-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 간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파크골프의 지속 가능성 도모해야"

체육발전연구회 토론회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체육발전연구회(대표의원 홍인숙,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는 지난달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지속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안된 추진전략을 검토하고 추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태범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 제주형 지속 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 모델을 이야기했다.

서 교수는 "파크골프 참가 인원 대비 부족했던 제주형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 및 미흡한 안전·편의시설 보수를 통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제주형 굿 거버넌스 구축 및 제주형 사계절 파크골프 축전 등 파크골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도자 확충을 위한 전문 기관 선정 등도 주문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강공순 제주도 파크골프협회 회장, 최정수 제주도장애인골프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홍인숙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파크골프는 더 이상 노인 스포츠가 아니다. 지속 가능한 파크골프 활성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지역 경제 동향과 시사점은

재정경제포럼 세미나 개최
지역 경제 지원 방안 모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재정경제포럼'(대표의원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지난달 2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제주 지역 경제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을 개최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2023년 경제 현황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이번 강연에는 조윤구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 과장이 강사로 나섰다.

조윤구 과장은 최근 제주지역 경제 동향 및 제주지역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과 채무상환능력평가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재정경제포럼 소속의원들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강종호 제주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김길훈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임창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경영지원실 실장이 참석해 토론의 장도 마련됐다.

박호형 대표의원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각각의 이슈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주지역 경제를 이해하고 도민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두화 부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여건과 최근 제주 지역 경제동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배운 점이 있듯 다가올 미래를 앞서 내다보고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전거 타고 플로깅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4일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에 앞장서며 '자전거 이용 생활화 및 그린 플로깅 캠페인'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의원 및 직원 40여명은 용담체육공원에서 이호테우해수욕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자전거 이용 생활화와 더불어 2040 플라스틱 제로섬 제주 만들기를 위한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해안가에 버려진 일회용품 및 폐스티로폼 등 다양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캠페인으로 전개했다.

"제주 건축물, 상징성 지녀"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 소속의원 역량강화워크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역문화특화발전연구회(대표의원 양용만, 국민의힘, 한림읍)는 지난 3일 도의회 의사당 지하1층 소통마당에서 소속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가 '건축자산으로서 지역 근현대건축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꾸렸다.

김태일 교수는 2016년 건축자산 기초조사에 참여하면서 연구했던 기초자료로 건축자산 추출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원형이 남아있는 올레길, 폭낭 중심의 공간환경, 기반 시설로서의 포구, 주거환경과 비주거 감귤창고 등 마을 특징들을 소개하며 연대별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활용성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양용만 대표의원은 "오늘날 지역 건축물이 타지역과 차별되는 정체성과 상징성도 지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며 "최근 제주도의 돌창고가 멋스러운 카페문화 주역으로 탈바꿈되면서 관광객들이 돌창고와 돌담을 제주의 매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남아있는 제주 건축물의 가치를 간과하지 말고 지역 자산으로서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학 의장, 대한민국 평판대상 영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2023 대한민국 평판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평판대상은 (사)한국크리에이터진흥협회와 진코리아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평판커뮤니케이션, 한국시민기자협회 등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주관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 '의정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매년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 의원 및 국가기관, 사회단체 문화예술인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라는 의정 목표 아래 활발한 의정 운영 활동을 펼치며 지역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경학 의장은 "앞으로도 제주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하성용 의원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국 17개 시·도의회별로 1명씩 위촉해 구성했으며, 지난 8일 청주 청남대에서 위촉식을 진행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문제 및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오는 2024년 6월말까지다.

하성용 의원은 "최근 10년간 제주는 10만명 이상의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는 지역 중 하나였으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와 머리를 맞대 지역소멸에 대응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청렴실천 당당대한민국
부정청탁 금품수수 안돼요

Q1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일까.

A **대상이 맞습니다.**

초중등교육법령과 학교폭력 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Q2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닐까.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간제 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이 됩니다.

Q3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될까요.

A **네. 드려서는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4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 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고요?

A **선물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담임 교사, 교과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Q5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될까요?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6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되나요?

A **받아도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비록 학부모 중에 공직자가 있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제주어 ㉒

가근ᄒᆞ다

(형용사) 친하고 다정하다

〈예문〉

웨롭걸랑 / 웬착손으로 ᄯᆞ르곡 / ᄂᆞ단손으로 드르쓰라
두 손은 시상이서 질릉 가근ᄒᆞ다
웬손은 추억이고 / ᄂᆞ단척 손은 현실이주
웬착손은 셍각이고 / ᄂᆞ단손은 실행이주
웨롭걸랑 / 웬착손으로 ᄯᆞ르곡 / ᄂᆞ단손으로 드르쓰라
우리는 아며도 혼차주기 / 웨로움을 실행ᄒᆞ라

- 시 「웨롭걸랑」에서

· 웨롭걸랑 : 외롭거든 · 웬착손 : 왼손 · ᄯᆞ르다 : 따르다
· ᄂᆞ단손 : 오른손 · 드르쓰다, 드르싸다 : 들이키다
· 시상이서 : 세상에서 · 질릉 : 제일
· 아며도, 아명ᄒᆞ여도 : 아무리해도 · 혼차주기 : 혼자이지

양전형 저 「제주어 용례 사전①」중에서

“미래는 아이들이 열어야 한다”

오 승 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주 교육열 높아
선인들의 지혜
풍요로운 제주의 밑거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상상과 예측 속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작과 인공지능의 발달은 사회 전반에 무한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 사회에 대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 제주는 예로부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학교가 없는 마을에서는 개인 소유의 땅을 기부하고, 출향 인사의 성금과 온 마을 주민의 정성으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인들의 지혜가 지금의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운 제주의 밑거름이 되어 왔다.

덕분에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아이 교육을 위해 도내로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듯 제주 문화에서 교육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제주 교육은 제주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선조들이 제주 교육의 미래를 준비해 준 만큼, 우리도 제주의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교육을 준비 해야 한다.

최근 미래교육의 화두는 교육에 ICT기술을 적용하는 에듀테크에 방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 교육시설의 디지털화 및 융합교육 등에 상당한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서 간과해선 안 될 것은 에듀테크의 근저에는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 교육은 학생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주입식으로 정답을 고르는 수업에서 벗어나, 기존교과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융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토론, 프로젝트, 탐구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답을 찾는 방식의 교수학습 전개가 필요하다.

학교별 특색있는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주형 자율학교 역시 학생 창의성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 변화의 일환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학교 및 교육시설이 기존 어른들의 시선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네모난 교실, 네모난 책상, 네모난 운동장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움직임이 가득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교실, 첨단 AI·디지털이 함께하는 교과서와 책상, 잔디·모래형이 아닌 공원같은 생태운동장,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행복한 놀이터가 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변화된 미래 학교 공간과 교육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와 순수한 감성이 넘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제주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이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산지전자경매 직배송 확대 방안 모색

김 경 훈
제주도 감귤유통과
주무관

**“중간거래비용 줄이고
농산물은 신선하게
거래는 투명하게”**

제주도정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농가의 자구노력을 비롯해 감귤원 원지 정비, 방풍수 제거, 토양피복재배 등 품질을 높이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보조금을 투입해 2016년 전국 최초로 제주시 농협공판장 산지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후 ‘19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식품 거래소’와 ‘20년 제주농협 조합공동사업 법인’의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에서도 산지 전자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에 비해 농산물 거래량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농산물 온라인 산지 전자경매 제도의 핵심은 직거래다. 이를 통해 중간거래비용을 줄이고 농산물은 신선하게, 거래는 투명하게 진행해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올해 11월 물류비 절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등 규제 개선을 통한 도매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도정은 제주농협과 공동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등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과 연계해 산지가격 결정권 확보로 제주농산물 산지 전자경매 직배송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으로 제주도정은 신뢰 가는 제주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산지 전자경매 유통경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 산지 전자경매를 통해 직접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쏟을 것이다.

“도민안전보험으로 보상 받으세요”

양 창 훈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

**“일상 속 사고 피해 보상
모든 도민에 해당
등록 외국인도 보장”**

제주도민이라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도민 안전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도민 안전보험은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및 범죄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최초 가입돼 운영되는 보험이다.

가입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 해당되며 등록 외국인도 보장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해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으며, 보장개시 이후 사고 발생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 청구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감전 사고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 장애(사망인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시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익사사고 및 농기계에 의한 사고시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다중밀집 인파 사고에 대해서도 새로 보장이 되고 있고 자연재난, 사회재난,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개 물림 사고, 화상 수술비, 뺑소니·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 등 모두 28개 항목에 대해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에 따른 구비서류는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고 유형마다 보장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전화 1522-3556) 로 문의 할 수 있다.

제주 청소년 의정활동 '생생 체험'

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오는 11월까지 진행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달 25일부터 2023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에 초등학교 6개팀 176명, 중학교 1개팀 45명, 고등학교 3개팀 76명, 기관 및 단체 6개팀 225명이 신청했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활동의 첫 날인 4월 26일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초등학교 5~6학년 18명과 제주시 오라초등학교 학생 21명이 장식했다. 이날 직접 의장, 의사담당관, 도지사, 교육감 등의 역할을 맡아 현안사항 보고, 도정·교육행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찬반토론 및 전자 표결, 3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모의의회를 진행했다.

특히 양홍식(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승아(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의원과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과의 만남의 장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의원들은 "오늘 의정체험을 통해 경청과 토론 문화를 배워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건강한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학 의장은 "청소년들이 의정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을 체득함으로써 건강하고 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람은 물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활동은 오는 11월까지 이어나가게 된다.

「재정정책정보지」발간 "재정 정책 이해 도울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정보 및 현안 이해를 돕기 위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1호를 온라인 발간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재정·예산 동향, 국내 주요 기관과 국회 관련 분석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 및 지방재정연구 동향, 법령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의 내용을 싣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의견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제언을 포함했다.

이번 호에서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2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 소요 추계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 및 제언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의 지방재정부담 추계, 2023년 시행 지방세 세법개정안 심의결과 및 주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경학 의장은 "심도 있는 자료와 정책제언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가 바로 제주 미래의 리더"

도의회, 모의의회 경연대회
6월 9일 중·고교 대상 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6월 9일 지난 2020년 이후 중단됐던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중·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제주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의사진행을 통해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 표현력을 이끌어내고 차세대 리더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2019년까지 도내 고등학생으로 참가를 제한했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중학생으로 참가 대상을 확대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 팀은 학교 교육(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 또는 제주지역 현안사항에 관한 내용 중 안건을 선정해 찬반 토론과 더불어 제주어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다.

김경학 의장은 "청소년들과 소통·공감하기 위해 청소년 의정체험을 비롯해 모의의회 경연대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 제주 미래의 리더인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3차 운영위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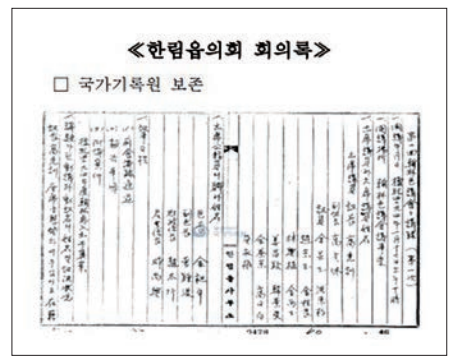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옴부즈맨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혁)는 지난 2일 도의회 소통마당에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6기 옴부즈맨 건의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2023년 제6기 옴부즈맨 운영조례 개정(안) 및 2023년도 옴부즈맨 선진 우수 사례 현장 견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혁 위원장은 "제6기 옴부즈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전문가 특강, 우수사례발표 등 옴부즈맨 활동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며 "이제는 옴부즈맨의 역량을 한데 모아 제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옛 기록물 찾습니다"

제주도의회, 올해 말까지
1952~1961년 자료 수집
"제주의 귀중한 보물 될 것"


≪한림읍의회 회의록≫
□ 국가기록원 보존

제주도 지방의회사 보존·전승을 위한 자료 수집 작업이 이뤄진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1952년부터 1961년(초대~3대) 제주도의회, 시·읍·면의회의 당시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사진, 신분증 등 각종 기록물을 수집한다.

구체적인 수집 대상은 초대~제3대 제주도 광역·기초의회로, 1952~1961년 제주도의회, 1952~1955년 제주읍의회, 1955~1961년 제주시의회, 1952~1956년 한림·서귀·대정면의회, 1956~1961년 한림·서귀·대정읍의회, 1952~1961년 애월·추자·조천·구좌·안덕·중문·남원·표선·성산면의회, 1956~1961년 한경면의회가 그 대상이다.

참여 방법은 기록물 기증의 경우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해 대상 기록물의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 하면 된다.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는 기록물 소재정보 제보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록물 기증자와 소재 정보 제보자에게는 소정의 감사 선물이 증정 되며, 기증기록물의 소유권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원본 수집과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사담당관실 기록팀(064-741-2251, 2253)으로 문의 하면 된다.

김경학 의장은 "여러분들의 기록물 제보와 기증은 제주의 귀중한 보물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가치 있는 기록들을 수집하는데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